

인도의 대규모 경제 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작성일: 2012년 10월 7일

- 인도정부가 유료비 지원, 소매업, 국내항공업, 전력거래, 방송서비스의 개방 및 개혁 정책안을 제안한 것에 연이어 보험, 연금, 선물환 선도거래 (forward), 기업법, 경쟁법, 국제공항지정, 인프라부채펀드관련 정책 등 1991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개혁안에 대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음.
- 인도정부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추가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하여 외국 인투자를 증대시키고, 침체해 있는 국내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표 1 인도정부의 추가적인 개혁 및 개방 정책 내용

개혁 부문	개혁내용	근거
보험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기존의 26%에서 49%로 상향	보험업체의 건전한 자본기반 확보 및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제공
연금	법·규정관련 권한의 하향조정 및 외국인 투자 허용	연금감시 강화 및 사회보장상품 개발 및 제공
선물환 선도 거래	선물환 선도거래 품목 확대 및 선도거래시장 위원회 권한 확대	선도거래를 통한 농민의 수입 및 혜택 확대
기업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제적 지출 확대	기업거버넌스 기준 강화 및 독립감독의 신뢰성 확대
경쟁법	인도경쟁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자발적 M&A허용	기업규정의 현대화
5개 국제공항 추가 지정	Lucknow, Varanasi, Tiruchirapallui, Mangalore, Coimbatore 5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	국제공항화 추진을 통한 투자자금 유입
인프라부채펀드의 3자 모델	인프라부채펀드의 대출자, 프로젝트 당국, 양수인간의 합의 모델 제시	신속한 인프라 투자
12차 경제발전 계획	연평균 8.2% 성장	내생적 성장 추구로 목표 달성

- 보험부문은 외국인 직접투자비중을 기존의 26%에서 49%로 확대하고 연금도 보험부문과 연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는 제안을 내각의

승인을 얻음.

- 외국재보험업자들에게 인도내에 재보험을 위한 지점 개설을 승인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업을 개업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기존의 100crore루피에서 50crore루피로 축소함.
- 연금관련 외국인투자는 49% 또는 26%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승인한다는 계획임.

■ 인도 기업법인 규정의 현대화를 통하여 경제발전 방안 마련

- 2011년 기업법을 개정하여 특정수준 이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출을 강제화 함.
- 법인의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인 법인장(MD)을 동일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 내각은 또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개정하여 모든 분야의 자발적 기업인 수 및 합병(M&A)을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의 소 관으로 조정

■ 선물환 선도거래규정법을 수정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선물환 선도시장위원회(FMC)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선물환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FMC를 독립시켜 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옵션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도입시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격위험관리(price risk management)를 통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그 외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추가로 국제공항 5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함.

-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내각은 대출자, 사업당국, 그리고 인프라 부채펀드의 양수인간의 3자 모델을 제시
- Lucknow, Varanasi, Tiruchirapalli, Mangalore, 그리고 Coimbatore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

■ 한편,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8.2%와 최종연도 성장률 9% 달성계획을 승인함.

- 인도경제가 내생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 800만 crore 루피의 재정수입, 즉 매년 GDP의 11.8% 재정 수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각이 승인함.
- 특히 내생적 성장 전략을 통하여 8.2%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의 시행속도를 증대시킨다는 전략

■ 이러한 거대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은 국회에서 승인을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선 BJP(Bharatiya Janata Party) 등 야당이 복합브랜드 소매업, 연료가격 인상 등은 물론 보험부문의 개방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 이에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은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막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임.
- 보험부문의 49%까지 개방은 보험부문으로 자본을 유입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개혁 및 개방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인도경제는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 인도정부의 강력한 개혁 조치로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이번 회기연도 후반기에는 112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는 2012/13년 후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인도가 장기적인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평가하면서 112억 달러의 외국인 금융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함. FDI도 208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ADB도 인도경제전망을 6.5%에서 5.6%로 하향조정하였지만, 만약에 개혁 및 개방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예상했던 성장률 이상으로 인도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더욱이 현재 야당 등의 반대는 연료가격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민들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번의 개혁조치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 총선은 2014년에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게는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도정부의 개혁 추진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연합정부의 일부 정당이 개혁 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당이 소수였을 때도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조치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인도정부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번 개혁조치가 어느 정도의 반대에 부딪치겠지만, 최종적으로 개혁조치의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